

KOSME

이슈포커스
2022-05호

「중소벤처기업 규제혁신 동향 조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 2022. 11 |

KOSME
이슈포커스

요 약 1

01 중소벤처기업 규제혁신 동향 조사 개요 2

02 중소벤처기업 규제혁신 동향조사 세부 내용 5

1. 中企 규제 체감도와 대응 현황 5

2. 기업 규제 환경 전망 8

3. 신산업 규제 애로 16

03 정책적 시사점 19

「중소벤처기업 규제혁신 동향 조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구분	내 용
<p>① 중소 규제 체감도와 대응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 중소기업의 10곳 중 4곳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애로사항을 경험했으나, 절반 이상은 정책 중개기관 등에 건의하기보다는 기업 자체 대응하고 있음 * 규제 대응현황 : 기업 자체 대응(58.1%), 중진공 등 중개기관 건의(14.4%), 민간단체 건의(11.3%) 순 · 전기·전자, 금속, 식품 업종이 전체 대비, 업력 7년 이상 기업이 7년 미만 창업 기업 대비, 규제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었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규제 애로사항 경험” 응답 비율: 전기·전자(57.6%), 금속(55.2%), 식품(50.0%) ↔ 전체(44.6%) - 전기·전자, 금속, 식품 업종은 환경, 안전 인증 관련 규제수준이 높아 애로를 겪었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업력 7년 이상(45.2%) ↔ 업력 7년 미만(42.7%)
<p>② 중소 기업 규제 환경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 중소기업의 10곳 중 4곳은 올해 기업 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 * 규제환경 전망 : 부정적(38.1%), 보통(49.7%), 긍정적(12.2%) · 부정적 전망 사유로 절반 이상이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 부족으로 응답 * 부정적 전망 사유 :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 부족(51.8%), 핵심규제 개선 미흡(29.9%) · 신산업 기업이 기존 업종 대비, 수출기업이 내수기업 대비, 업력 7년 이상 기업이 업력 7년 미만 기업 대비 기업 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 * 부정적 전망 응답 비율 : 신산업(35.1%) ↔ 기존 업종(25.8%)/ 수출(42.8%) ↔ 내수(36.5%)/ 업력 7년 이상(38.5%) ↔ 업력 7년 미만(36.6%)
<p>③ 규제개선 우선순위와 필요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 중소기업은 고용·노동 분야 규제로 인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 * 부담이 큰 규제 : 고용·노동(38.2%), 자금조달(금융)(15.6%), 환경(7.4%), 세제(6.1%), 기술개발(5.9%) · 규제혁신을 위해 필요한 대책은 중소기업 비용·행정 부담 완화와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 * 중소기업 비용·행정부담 완화(31.4%),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27.7%), 규제혁신 거버넌스 구축(13.7%), 덩어리 규제 개선·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강화(9.0%), 규제심판제도(5.0%)
<p>④ 신사업 규제 애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 중소기업 절반 이상(55.1%)은 규제로 인해 신규사업 진출시 어려움 경험 · 포지티브 규제, 중복된 행정규제, 규제 부재 등이 주요 애로 요인 * 신규사업 진출 어려움 사유 : 포지티브 규제(31.0%), 중복된 행정규제 부담(25.0%), 규제 부재로 인한 제품개발과 시장 진입 불가능(23.0%), 국제 표준 대비 규제 부담 과도(10.0%) ·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큰 기업 성장 단계는 창업기업 단계와 창업 7년 이후로 조사 * 창업기업 단계(44.2%)(창업초기(16.6%)+창업도약(27.6%)), 창업 7년 이후(42.5%), 중견대기업 진입시(7.3%)
<p>⑤ 정책적 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기업 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했고, 부정적 전망 사유로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아, 중소기업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 혁신 필요 · 중소기업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고용·노동, 자금조달, 환경 분야 규제 개선을 강화하고,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적극적·체계적 발굴 개선 추진 · 중소기업은 불합리한 행정규제 뿐만 아니라, 기업 현장과 괴리되어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지원 요건이나 기준을 규제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비용·행정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 현장에서 개선수요가 큰 현장애로를 적극적 발굴·해소하여 중소기업 활력 제고 필요

01 | 중소기업 규제혁신 동향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정부의 규제혁신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으로, 과감한 규제철폐를 통한 우리 경제 활력 제고 필요
 - * 규제혁신 만족도 100점 만점 만족도에 49.8점 (경영자총협회, '21.6월)
- 중소기업의 규제체감도와 대응현황, 부담이 큰 규제,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여, 향후 규제혁신 지원 대책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 개요

구 분	주요내용
조사대상	◆ 중진공 정책모니터링단 1,000개사
조사기간	◆ '22. 08월 24일(수) ~ 09월 4일(일)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유선 및 SMS, E-mail 등 조사
표본크기	◆ 유효응답 기준 352개
표본오차	◆ 전체 95% 신뢰수준에서 ±5.22%P

○ 조사 내용

구 분	주요내용
중소 규제 체감도와 대응 현황	◆ 중소기업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경험 여부와 애로 유형 ◆ 중소기업 규제 애로사항 대응 방법(정책중개기관 건의 사유 등)
중소 규제 환경 전망과 개선 필요 규제	◆ 중소기업 규제 환경 전망과 부정적 전망 사유 ◆ 중소기업 가장 부담이 큰 규제분야 및 세부 이슈 ◆ 규제혁신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 ◆ 규제로 인해 가장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기업 성장 단계
중소 신산업 규제 애로	◆ 중소기업 규제로 인한 투자계획 지연·축소·포기 경험 여부 ◆ 중소기업 규제로 인한 신규사업 진출 어려움 경험 여부·주요 애로요인 ◆ 미래 신산업 분야 중 규제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야

○ 응답자 특성

구 분	업체수 (개)	비중 (%)	
전 체	352	100.0	
지역	서울	42	11.9
	인천/경기	100	28.4
	강원	10	2.8
	대전/세종/충북/충남	44	12.5
	광주/전북/전남	43	12.2

구 분		업체수 (개)	비중 (%)
지역	대구/경북	54	15.3
	부산/울산/경남	57	16.2
	제주	2	0.6
매출액 (21년도)	5 억 미 만	21	6.0
	1 0 억 미 만	28	8.0
	5 0 억 미 만	131	37.2
	1 0 0 억 미 만	69	19.6
	3 0 0 억 미 만	83	23.6
	3 0 0 억 이 상	20	5.7
종업원 수	5인 미만	50	14.2
	10인 미만	56	15.9
	20인 미만	90	25.6
	50인 미만	111	31.5
	100인 미만	29	8.2
	300인 미만	15	4.3
	300인 이상	1	0.3
업종	금속	67	19.0
	기계	74	21.0
	화학	33	9.4
	전기·전자	33	9.4
	섬유	17	4.8
	식품	20	5.7
	정보처리	19	5.4
	유통	62	17.6
	기타	27	7.7
신산업 여부/업종	신산업	77	21.9
	친환경 이동수단	5	6.5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신소재	17	22.1
	ICT 융합	15	19.5
	신서비스	2	2.6
	바이오·의료	7	9.1
	기타	31	40.3
	신산업 아님	275	7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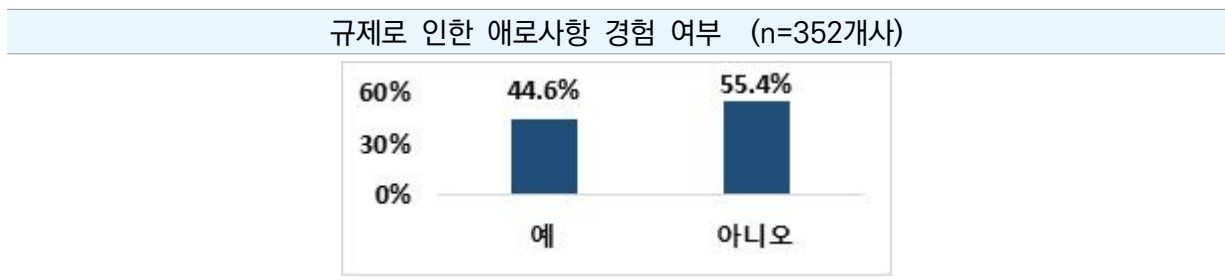
구 분		업체수 (개)	비중 (%)
업 력	3년 미만	8	2.3
	3~5년 미만	33	9.4
	5~7년 미만	41	11.6
	7~10년 미만	59	16.8
	10~15년 미만	82	23.3
	15~20년 미만	48	13.6
	20년 이상	81	23.0
내수/수출	내수기업	268	76.1
	수출기업	84	23.9
수도권 여부	수도권	142	40.3
	비수도권	210	59.7

02 | 중소기업 규제혁신 동향조사 세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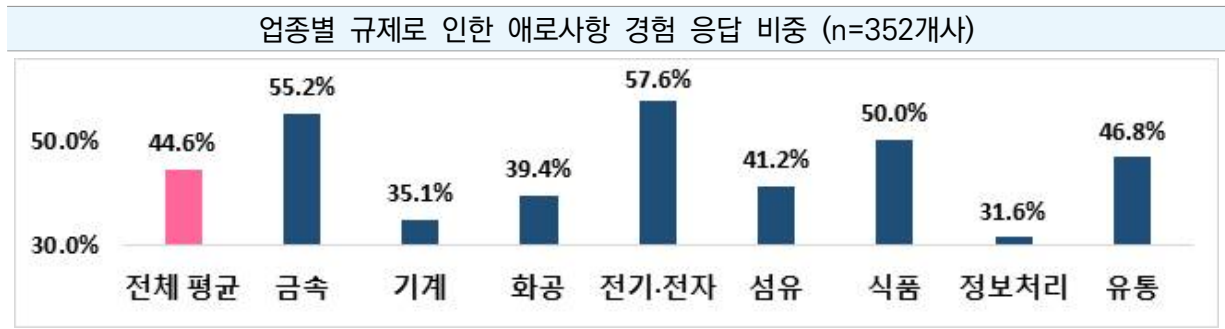
1 | 中企 규제 체감도와 대응 현황

1 | 응답 中企 44.6%, 규제로 인해 애로사항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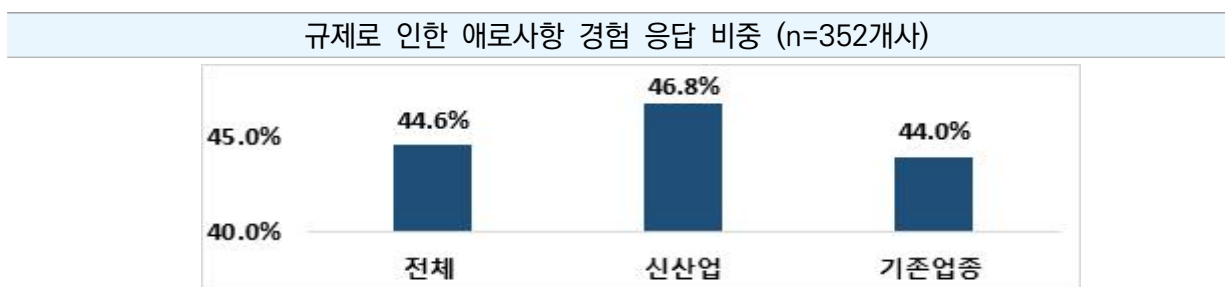
- 응답기업의 10곳 중 4곳 이상(44.6%)은 규제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업종별로 전기·전자(57.6%), 금속(55.2%), 식품(50.0%)등이 규제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었다는 응답이 전체(44.6%)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금속, 전기용품, 식품 등의 업종은 환경·안전 인증 관련 규제 수준이 높아, 애로사항 경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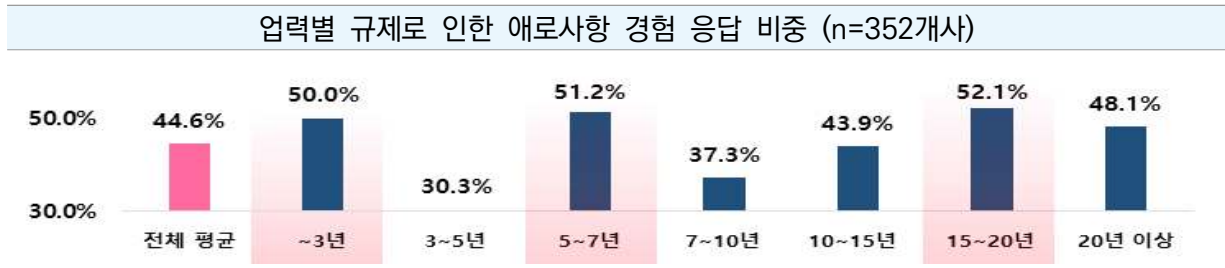
- 신산업 업종의 규제 애로사항 경험 응답 비율(46.8%)은 기존 업종(44.0%) 대비 높은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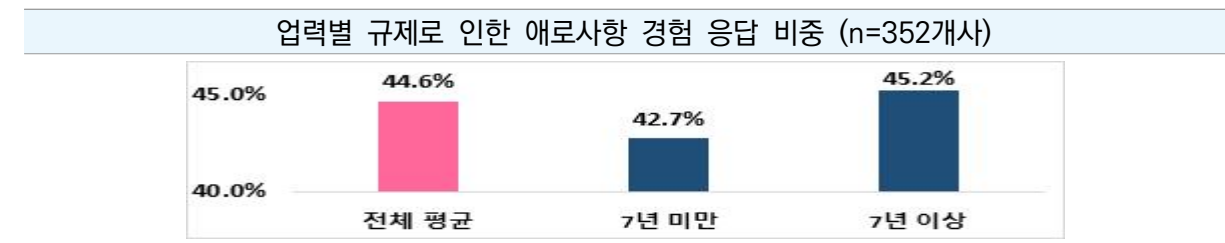
- 매출규모가 클수록 규제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었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음

* 애로사항경험유(%) : (5억 미만) 42.9, (50억 미만) 43.5, (100억 미만) 44.9, (300억 미만) 47.0, (300억 이상) 40.0

- 업력별로 규제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3년 미만 (50.0%), 5~7년 미만(51.2%), 15~20년 미만(52.1%) 기업에서 전체(44.6%)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음



- 또한 7년 이상 기업(45.2%)이 7년 미만 기업(42.7%) 대비 높아, 창업기업 뿐만 아니라, 업력 7년 이상 성장기·성숙기 기업들의 규제로 인한 애로수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됨



2 규제로 인해 경험한 애로사항 : 인력 채용 포기(28.6%)

-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으로는 인력 채용 포기(28.6%)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매출감소(25.7%), 사업확장 포기(연기)(23.4%), 기술개발 지연 (9.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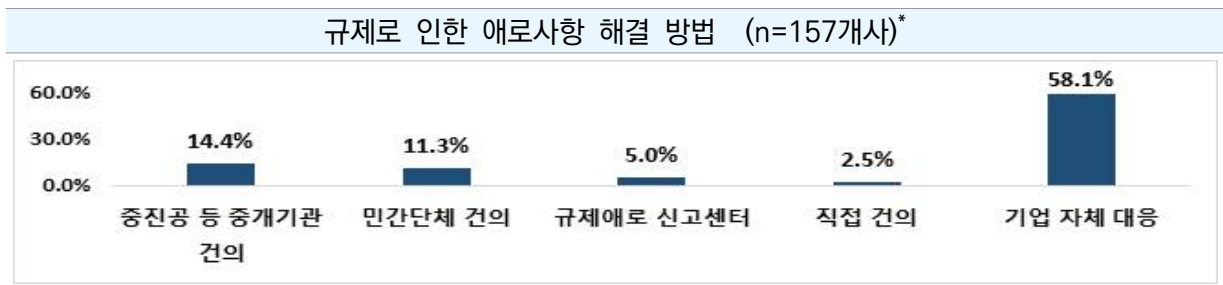


* 규제로 인해 애로사항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기업 157개사

- 업종별로 정보처리 업종은 “기술 개발 지연” 응답 비율이 33.3%로 전체 평균 (9.1%) 대비 3배 이상 높아, 규제로 인해 기술개발 애로가 큰 것으로 보임
- 기타 애로사항으로는 종업원 감소, 대출규제, 사업 위축, 투자 및 양산화 지연, 외국인 고용 쿼터, 상장지연, 불필요한 점검 등을 응답함

3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해결 : 中企 58.1%, 기업 자체 대응

-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해결 방법으로는 기업 자체 대응(58.1%)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중진공 등 정부 규제 중개기관을 통한 건의(14.4%), 협회 등 민간단체 등을 통한 건의(11.3%),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243개 지자체, 지방중기청)(5.0%), 규제 담당기관 홈페이지,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한 직접 건의(2.5%) 순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자체 대응한다는 응답이 높아, 적극적인 규제발굴과 기업들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창구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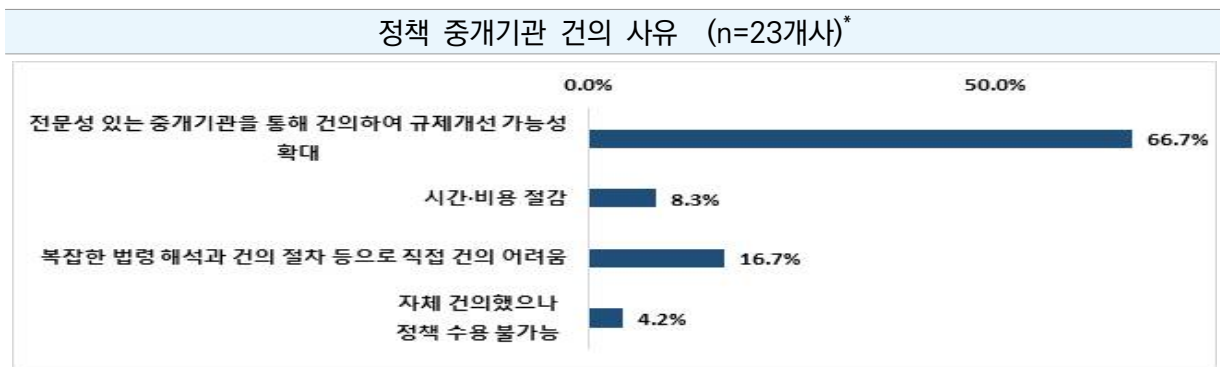
* 규제로 인해 애로사항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기업 157개사

- 매출액이 높을수록 기업 자체 대응한다는 응답이 높았음

* 기업 자체 대응 : (5억 미만) 44.4%, (10억 미만) 46.2%, (50억 미만) 51.7%, (100억 미만) 62.5%, (300억 미만) 67.5%, (300억 이상) 75.0%

4 정책 중개기관 건의 사유 : 中企 66.7%, 규제 개선 가능성 확대

- 정책 중개기관을 통해 건의한 응답자들의 중개기관 활용 사유로는, 전문성 있는 중개기관을 통해 건의함으로써 규제 개선 가능성 확대(66.7%)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복잡한 법령 해석과 건의 절차 등으로 직접 건의 어려움(16.7%), 시간과 비용 절감(8.3%), 자체 건의했으나 정책 수용 불가능(4.2%) 순으로 나타남



*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정책 중개기관을 통해 해결한다고 응답한 기업 23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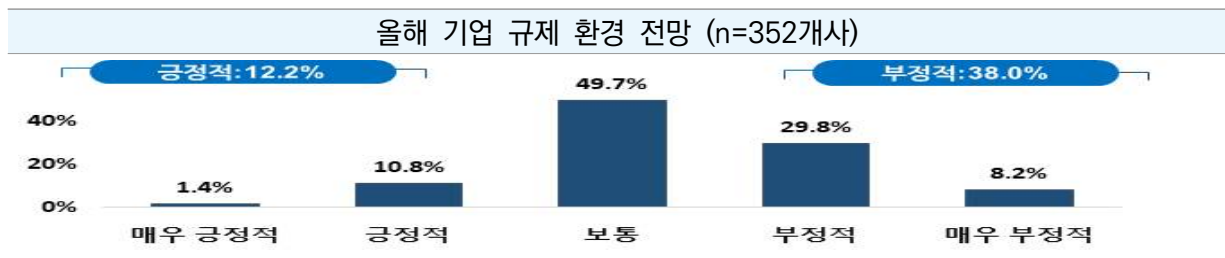
5 기업 자체 규제 건의 사유 : 中企 37.8%, 건의결과 피드백 부족

-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규제를 건의하는 이유로는 건의결과에 대한 불충분한 피드백(37.8%)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번거로운 중개기관 건의 절차(30.6%), 건의내용 타기관 비공개 희망(11.2%)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이유로는 방법과 경로를 모름, 담당기관을 모름, 불이익 발생 우려 등이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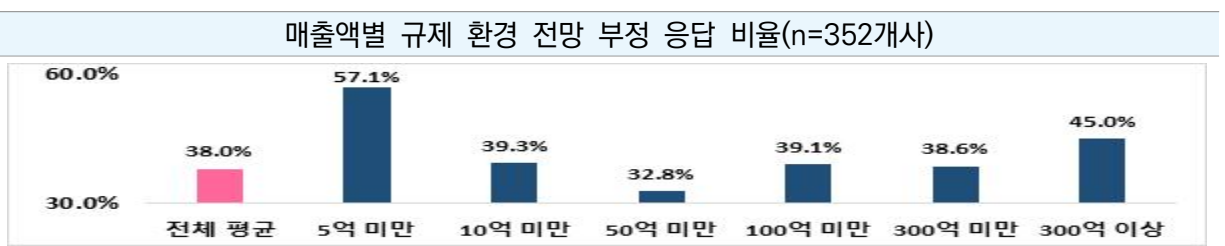
2 기업 규제 환경 전망

1 올해 기업 규제 환경 전망 : 中企 38.0%, 부정적이라고 응답

- 응답 中企의 38.0%가 올해 규제 환경이 “부정적(매우 부정적(8.2%) + 부정적(29.8%))”일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보통(49.7%)”, “긍정적(12.2%)(매우 긍정적(1.4%) + 긍정적(10.8%))”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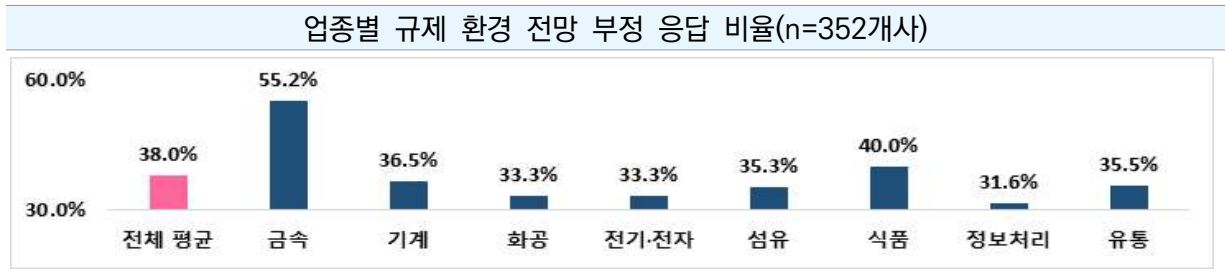


- 매출액별로 5억 미만 기업과 업력 3년 미만 기업의 “부정적” 응답 비율은 각각 57.1%, 50.0%로, 전체 대비(38.0%) 상대적으로 높아, 창업초기 소규모 기업들이 기업 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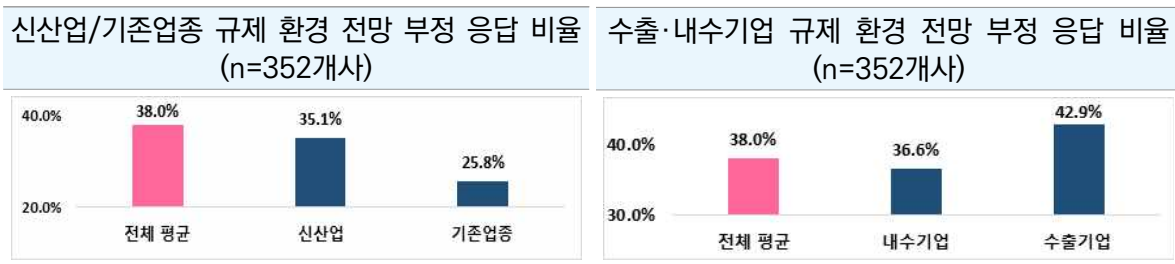
- 업종별로 기업 규제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한 응답 비율은 금속(55.2%), 식품(40.0%), 기계(36.5%), 유통(35.5%), 섬유(35.3%), 전기·전자·화학(33.3%), 정보처리(31.6%) 순으로 나타나, 금속·식품 업종은 전체 평균(38.0%)보다 기업 규제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했고, 전기·전자/화학/정보처리 업종은 규제환경 전망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됨

- 규제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던 금속, 식품 업종은 환경·안전 인증 관련 규제 수준이 높아 규제환경 전망 또한 부정적인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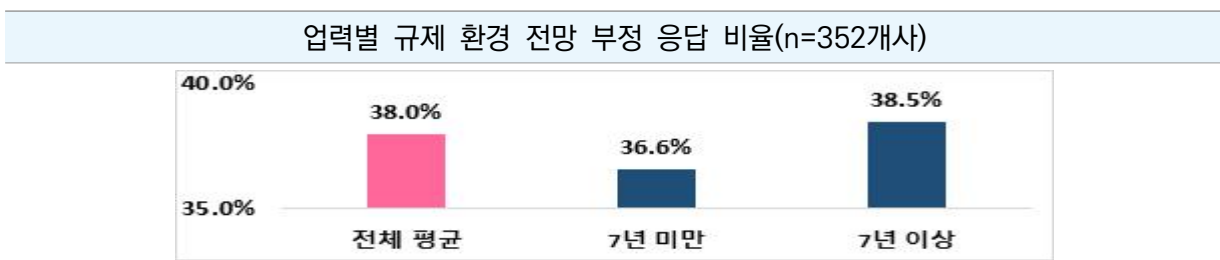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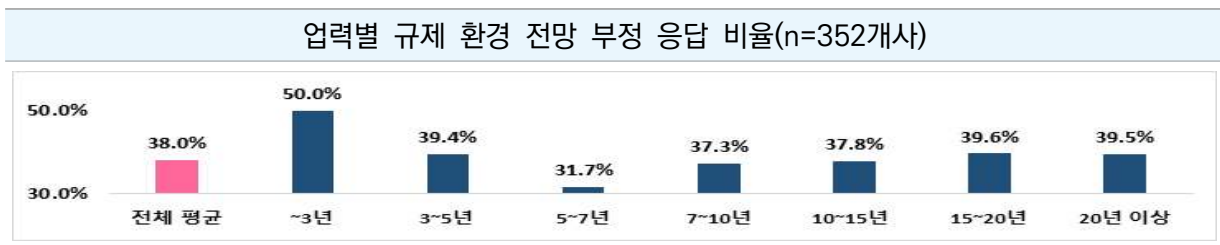


- 신산업 분야 기업(35.1%)*들이 기존 기업(25.8%)보다, 수출기업(42.9%)이 내수기업(36.6%)보다 기업 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함. 이는 규제자유특구 등 신산업 분야와 수출기업의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 신산업 분야 기업 : 무인이동체(드론, 자율주행, 무인선박 등),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이동수단,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신소재, ICT 융합(IoT·빅데이터, AI, VR·AR, 클라우드, 지능로봇), 신서비스(핀테크, O2O), 바이오·의료(의약품·바이오, 의료기기·서비스)



- 업력별로 “부정적 전망” 응답 비중은 3년 미만(50.0%) 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업력 7년 이상 기업(38.5%)이 업력 7년 미만 기업(36.6%)보다 기업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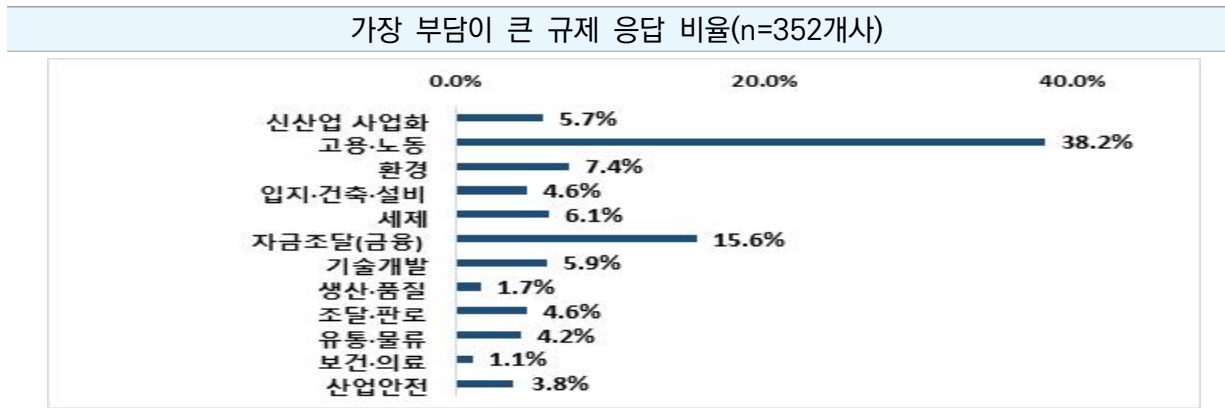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①매우 부정적	②부정적	③보통	④긍정적	⑤매우 긍정적	부정 (①+②)	긍정 (④+⑤)	
전체	352	8.2	29.8	49.7	10.8	1.4	38.1	12.2	
매출액	5억 미만	21	23.8	33.3	28.6	9.5	4.8	57.1	14.3
	10억 미만	28	0.0	39.3	53.6	3.6	3.6	39.3	7.1
	50억 미만	131	6.1	26.7	54.2	10.7	2.3	32.8	13.0
	100억 미만	69	13.0	26.1	50.7	10.1	0.0	39.1	10.1
	300억 미만	83	8.4	30.1	45.8	15.7	0.0	38.6	15.7
	300억 이상	20	0.0	45.0	50.0	5.0	0.0	45.0	5.0
업종	금속	67	11.9	43.3	35.8	6.0	3.0	55.2	9.0
	기계	74	6.8	29.7	51.4	12.2	0.0	36.5	12.2
	화학	33	6.1	27.3	54.5	9.1	3.0	33.3	12.1
	전기·전자	33	6.1	27.3	45.5	15.2	6.1	33.3	21.2
	섬유	17	0.0	35.3	58.8	5.9	0.0	35.3	5.9
	식품	20	5.0	35.0	50.0	10.0	0.0	40.0	10.0
	정보처리	19	5.3	26.3	52.6	15.8	0.0	31.6	15.8
	유통	62	11.3	24.2	50.0	14.5	0.0	35.5	14.5
	기타	27	11.1	11.1	70.4	7.4	0.0	22.2	7.4
신산업	신산업	77	10.4	24.7	57.1	6.5	1.3	35.1	7.8
	기존산업	275	7.6	31.3	47.6	12.0	1.5	25.8	9.7
업력 (1)	3년 미만	8	0.0	50.0	50.0	0.0	0.0	50.0	0.0
	3~5년 미만	33	12.1	27.3	51.5	6.1	3.0	39.4	9.1
	5~7년 미만	41	2.4	29.3	56.1	12.2	0.0	31.7	12.2
	7~10년 미만	59	6.8	30.5	50.8	6.8	5.1	37.3	11.9
	10~15년 미만	82	8.5	29.3	57.3	4.9	0.0	37.8	4.9
	15~20년 미만	48	12.5	27.1	45.8	12.5	2.1	39.6	14.6
	20년 이상	81	8.6	30.9	39.5	21.0	0.0	39.5	21.0
업력 (2)	7년 미만	82	6.1	30.5	53.7	8.5	1.2	36.6	9.8
	7년 이상	270	8.9	29.6	48.5	11.5	1.5	38.5	13.0
수출 여부	내수기업	268	7.8	28.7	50.4	11.2	1.9	36.6	13.1
	수출기업	84	9.5	33.3	47.6	9.5	0.0	42.9	9.5

② 기업 규제 환경 부정적 전망 사유 : 中企 51.8%,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 미흡

- 기업 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한 사유로는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 미흡(51.8%)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규제 개선 미흡(29.9%), 규제개혁 법안 통과 지연(8.8%), 신산업 분야 규제 신설·강화(2.2%) 순으로 응답함
- 기타 사유로는 유연성 없는 노동시장, 무조건 규제만 하는 것, 환경 문제에 따른 지속적인 규제 증가 등임

③ 가장 부담이 큰 규제분야 : 中企 38.2%, 고용·노동

- 기업 활동에서 가장 부담이 큰 규제분야로는 고용·노동(38.2%)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자금조달(금융)(15.6%), 환경(7.4%), 세제(6.1%), 기술개발(인증, 특허)(5.9%), 신산업 사업화(5.7%), 입지·건축·설비, 조달·관로(4.6%), 유통·물류(4.2%), 산업안전(3.8%), 생산·품질(1.7%), 보건·의료(1.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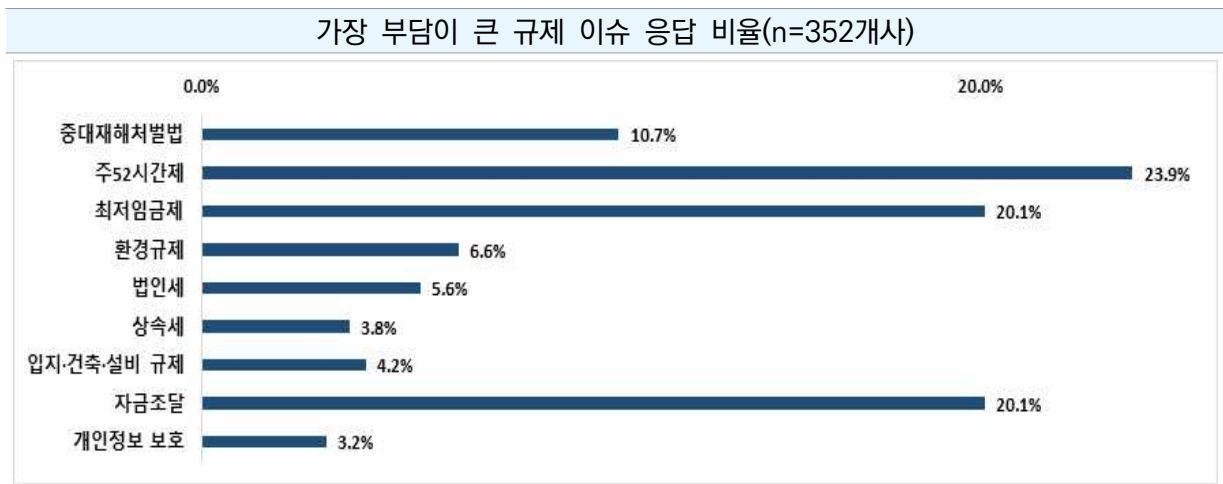
- 종업수가 많은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고용·노동을 가장 부담이 높은 규제로 보았으며,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자금조달(금융)을 가장 높은 규제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고용·노동 비중(%) : (~5인)18.7, (~10인)35.4, (~20인)31.5, (~50인)49.3, (~100인)55.3, (~300인)66.7
- * 자금조달 비중(%) : (~5인)24.0, (~10인)13.9, (~20인)16.9, (~50인)11.0, (~100인)13.2, (~300인)20.0
- 업종별로 정보처리는 신산업 사업화 부문 규제(42.9%)가 가장 큰 부담이라고 응답하여, 신규 사업 기회 창출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금속과 화공업종의 “환경” 응답 비중이 각각 15.9%, 10.3%로 전체 평균(7.4%) 대비 높아, 상대적으로 환경 부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식품과 유통 업종의 “자금조달(금융)” 응답 비중이 각각 29.2%, 22.8%로 전체 평균(15.6%) 대비 높아, 상대적으로 금융 부문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단위 : 전체 응답, %

구분	사례 수	신산업 사업화	고용·노동	환경	입지·건축·설비	세계	자금조달(금융)	기술개발	생산·품질	조달·판로	유통·물류	보건·의료	산업안전
전체	352	5.7	38.2	7.4	4.6	6.1	15.6	5.9	1.7	4.6	4.2	1.1	3.8
제조업·서비스업	5인 미만	50	9.3	18.7	5.3	5.3	9.3	24.0	8.0	4.0	5.3	6.7	2.7
	10인 미만	56	5.1	35.4	3.8	6.3	6.3	13.9	6.3	1.3	7.6	3.8	6.3
	20인 미만	90	4.6	31.5	10.0	6.2	8.5	16.9	6.9	1.5	3.1	3.1	5.4
	50인 미만	111	5.9	49.3	9.6	2.2	2.9	11.0	5.1	1.5	3.7	5.1	2.2
	100인 미만	29	2.6	55.3	5.3	5.3	2.6	13.2	2.6	0.0	7.9	2.6	2.6
	300인 미만	15	6.7	66.7	0.0	0.0	6.7	20.0	0.0	0.0	0.0	0.0	0.0
	300인 이상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업종	금속	67	2.4	41.5	15.9	4.9	0.0	12.2	6.1	3.7	4.9	2.4	6.1
	기계	74	3.7	45.4	5.6	3.7	3.7	13.0	7.4	0.9	3.7	3.7	5.6
	화학	33	8.6	31.0	10.3	6.9	5.2	5.2	10.3	1.7	6.9	5.2	5.2
	전기·전자	33	5.1	28.2	2.6	7.7	2.6	23.1	10.3	2.6	7.7	7.7	0.0
	섬유	17	3.7	37.0	0.0	3.7	11.1	11.1	11.1	3.7	3.7	11.1	3.7
	식품	20	0.0	41.7	8.3	8.3	8.3	29.2	0.0	0.0	4.2	0.0	0.0
	정보처리	19	42.9	33.3	0.0	0.0	4.8	19.0	0.0	0.0	0.0	0.0	0.0
	유통	62	2.5	35.4	7.6	2.5	12.7	22.8	1.3	1.3	5.1	6.3	0.0
	기타	27	5.6	38.9	2.8	5.6	13.9	16.7	2.8	0.0	2.8	0.0	2.8

4 부담이 큰 규제 이슈 : 中企 23.9%, 주52시간제

- 기업 활동에서 가장 부담이 큰 규제 이슈로는 주52시간제(23.9%)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최저임금제·자금조달(20.1%), 중대재해처벌법(10.7%), 환경규제(화평법,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등)(6.6%), 법인세(5.6%), 입지·건축·설비 규제(4.2%), 상속세(3.8%), 개인정보 보호(3.2%), 기타(2.0%) 순으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주52시간제 응답 비중이 높았으며, 매출액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자금조달 응답 비중이 높았음

- 업종별로 금속과 기계 업종은 주52시간제 응답 비중(34.9, 29.2%)이 전체 평균(23.9%) 대비 높아, 금속과 기계 등은 장시간 노동업종으로 주52시간제 부담이 큰 것으로 판단됨
 - 노동집약적인 섬유업종은 최저임금제를 가장 부담이 큰 규제(36.4%)로 꼽아 타 업종과 차이를 보였으며,
 - 화공업종은 환경규제 응답 비중이 14.9%로 전체(6.6%) 대비 2배 이상 높아 환경규제 부담이 큰 것으로 보임. 또한, 정보처리 업종은 개인정보보호 응답 비율이 9.5%로 전체(3.2%) 대비 3배 이상 높게 나타나, 정보보호 분야 규제 부담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신산업 분야 기업은 가장 부담이 큰 기업규제 이슈로 자금조달(26.3%)을, 기존 기업은 주52시간제(25.0%)를 꼽아 산업별로 부담이 큰 규제 이슈가 상이한 것으로 조사됨
- 업력별로 업력 7년 미만 기업은 자금 조달(26.7%)을 업력 7년 이상기업은 주52시간제(25.1%)를 가장 부담이 큰 규제라고 응답하여, 업력별도 부담을 느끼는 규제 분야가 상이한 것으로 보여짐

단위 : 전체 응답, %

구 분	사례 수	중대재해 처벌법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	환경규제	법인세	상속세	임지 건축·설비	자금조달	개인정보 보호	기타
전체	352	10.7	23.9	20.1	6.6	5.6	3.8	4.2	20.1	3.2	2.0
매출액	5억 미만	21	12.5	12.5	28.1	3.1	3.1	3.1	28.1	3.1	3.1
	10억 미만	28	6.7	8.9	15.6	6.7	13.3	0.0	6.7	35.6	6.7
	50억 미만	131	10.9	20.8	22.4	6.3	4.7	3.1	4.2	21.9	3.6
	100억 미만	69	14.9	26.7	18.8	5.0	4.0	5.9	5.0	13.9	3.0
	300억 미만	83	7.3	36.4	18.2	10.0	5.5	5.5	1.8	13.6	1.8
	300억 이상	20	13.0	21.7	13.0	4.3	8.7	0.0	8.7	21.7	0.0
업종	금속	67	6.0	34.9	24.1	7.2	1.2	0.0	3.6	19.3	2.4
	기계	74	12.3	29.2	16.2	9.2	5.4	4.6	2.3	14.6	4.6
	화공	33	12.8	21.3	17.0	14.9	4.3	2.1	4.3	19.1	2.1
	전기·전자	33	9.4	17.0	15.1	3.8	5.7	1.9	9.4	32.1	3.8
	섬유	17	9.1	22.7	36.4	0.0	4.5	4.5	4.5	4.5	9.1
	식품	20	11.1	29.6	25.9	0.0	0.0	7.4	7.4	18.5	0.0
	정보처리	19	9.5	0.0	14.3	0.0	14.3	9.5	0.0	38.1	9.5
	유통	62	11.4	12.7	20.3	6.3	11.4	5.1	3.8	26.6	0.0
	기타	27	14.6	26.8	24.4	2.4	4.9	4.9	4.9	12.2	2.4
신산업 여부	신산업	77	11.1	19.2	15.2	9.1	6.1	3.0	4.0	26.3	3.0
	기존산업	275	10.6	25.0	21.3	5.9	5.4	4.0	4.2	18.6	3.2
업력	7년 미만	82	7.5	20.0	20.0	5.8	8.3	3.3	4.2	26.7	3.3
	7년 이상	270	11.7	25.1	20.1	6.8	4.7	3.9	4.2	18.0	3.1

5 개선이 필요한 규제 : 금융 지원 조건 완화, 신제품·신기술 개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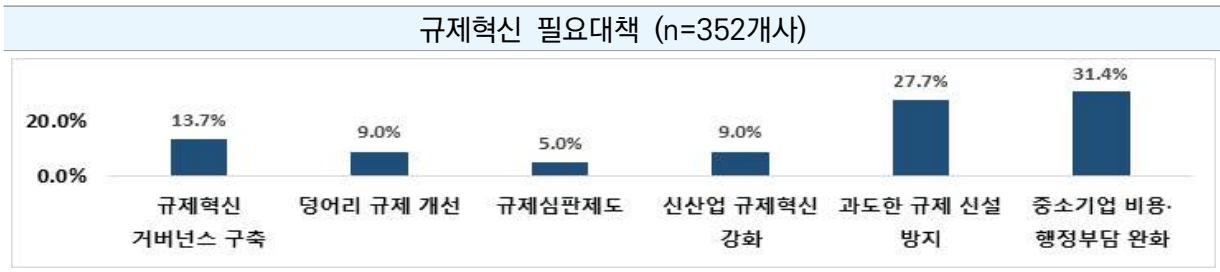
- 기업활동에 있어 가장 개선이 필요한 규제로는 금융지원 조건 완화(42.4%)와 신제품·신기술 개발 지원 강화(17.5%)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류제출·절차 간소화 등 불편 해소(9.8%), 조달·입찰 등 참여기준, 절차 등 완화(9.1%), 건축·설비 규제 합리화(8.2%), 수수료·사용료 부담 완화(5.3%), 인증·특허·지식재산 규제애로(4.8%), 기타(2.9%) 순으로 조사됨
- 기타 의견으로 고용계약시 업종별 자율성 제공, 근로기준법, 노동환경 등이 조사됨
- 업종별로 기계/화공/정보처리 업종의 신제품·신기술 개발 지원 강화 응답비중이 각각 25.6/28.3/27.3%로 전체 평균(17.5%)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신제품 기술 개발 정책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금속/식품/유통 업종의 금융지원 조건 완화 및 지원 확대 응답 비중이 (51.3/70.0/56.9%) 전체(42.4%) 대비 높았으며, 화공은 건축·설비 규제 합리화 응답 비중(15.2%)이 전체(8.2%)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 신산업 분야는 신제품·신기술 개발지원 강화 응답 비중(25.3%)이 전체 대비 (17.5%)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기존 기업은 금융지원 조건 완화 및 지원 확대 응답 비중(44.5%)이 상대적으로 높아, 업종별로 개선 필요 규제에 대한 수요 차이가 있었음

단위 : 전체 응답, %

구분	사례 수	신제품·신기술 개발 지원	인증·특허·지식재산 규제애로	건축·설비 규제 합리화	조달·입찰 참여기준, 절차 완화	금융지원 조건 완화 지원확대	수수료·사용료 부담 완화	서류제출·절차간소화 불편해소	기타	
전체	352	17.5	4.8	8.2	9.1	42.4	5.3	9.8	2.9	
업종	금속	67	13.2	1.3	10.5	6.6	51.3	3.9	9.2	3.9
	기계	74	25.6	7.3	6.1	9.8	37.8	0.0	11.0	2.4
	화공	33	28.3	8.7	15.2	4.3	26.1	4.3	8.7	4.3
	전기·전자	33	20.0	11.1	8.9	13.3	31.1	4.4	8.9	2.2
	섬유	17	13.6	4.5	4.5	13.6	22.7	18.2	13.6	9.1
	식품	20	10.0	0.0	15.0	0.0	70.0	0.0	5.0	0.0
	정보처리	19	27.3	0.0	0.0	13.6	36.4	13.6	9.1	0.0
	유통	62	8.3	2.8	6.9	8.3	56.9	8.3	6.9	1.4
	기타	27	9.4	3.1	3.1	15.6	40.6	6.3	18.8	3.1
신산업 여부	신산업	77	25.3	6.6	12.1	8.8	35.2	2.2	8.8	1.1
	기존산업	275	15.3	4.3	7.1	9.2	44.5	6.1	10.1	3.4

⑥ 규제혁신을 위해 필요한 대책 : 중소기업 비용·행정부담 완화

- 규제혁신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는 중소기업 비용·행정부담 완화(31.4%)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27.7%), 규제혁신 거버넌스 구축(13.7%), 덩어리 규제 개선·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강화(각 9.0%), 규제 심판제도(5.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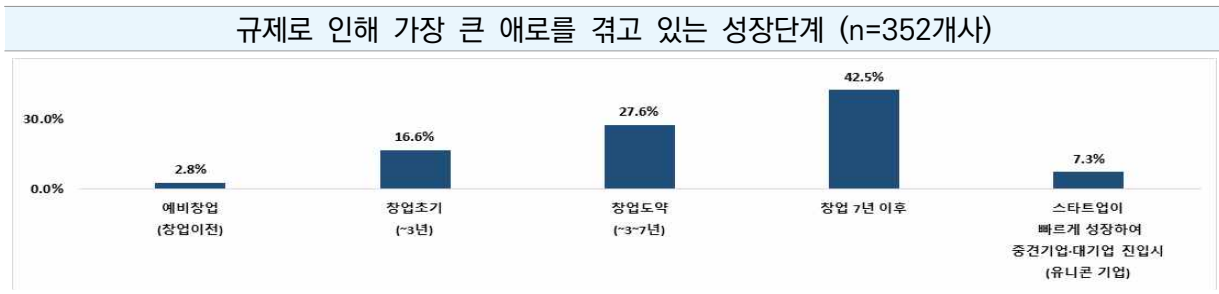
- 업종별로 기계/화공/섬유 업종은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33.3/28.2/27.3%)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타업종과 차이를 보임
 - 화공 업종은 규제심판제도 응답 비중(12.8%)이 전체 평균(5.0%) 대비 2배 이상 높았고, 정보처리 업종은 신산업 규제혁신 강화 응답 비중(20.0%)이 전체(9.0%) 대비 2배 이상 높아, 해당 분야 정책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임
- 신산업 기업도 규제혁신을 위한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신산업 규제혁신 강화 보다 중소기업 비용·행정부담 완화를 가장 많이 선택하여, 기업 현장 규제의 적극적인 발굴·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필요

구분	사례 수	규제혁신 거버넌스 구축	덩어리 규제 개선	규제심판제도	신산업 규제혁신 강화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	중소기업 비용·행정부담 완화	기타	
전체	352	13.7	9.0	5.0	9.0	27.7	31.4	4.2	
업종	금속	67	13.2	17.6	4.4	5.9	16.2	33.8	8.8
	기계	74	13.3	6.7	1.3	8.0	33.3	30.7	6.7
	화공	33	17.9	2.6	12.8	12.8	28.2	23.1	2.6
	전기·전자	33	18.4	15.8	5.3	10.5	18.4	31.6	0.0
	섬유	17	9.1	9.1	4.5	13.6	27.3	22.7	13.6
	식품	20	13.6	13.6	4.5	0.0	31.8	36.4	0.0
	정보처리	19	5.0	0.0	10.0	20.0	25.0	40.0	0.0
	유통	62	11.1	3.2	1.6	7.9	33.3	41.3	1.6
기타	27	18.8	9.4	9.4	9.4	37.5	15.6	0.0	
신산업 여부	신산업	77	16.5	7.1	3.5	15.3	21.2	31.8	4.7
	기존산업	275	12.9	9.5	5.4	7.1	29.6	31.3	4.1

7 규제로 인해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성장단계 : 창업기업 단계, 창업 7년 이후

- 규제로 인해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성장 단계는 창업기업 단계(~7년)(44.2%)*와 창업 7년 이후(42.5%)로 조사되었으며, 이어서 중견기업·대기업 진입시(유니콘 기업)(7.3%), 예비창업(창업 이전)(2.8%) 순으로 나타남

* 창업기업 단계 : 창업초기(~3년)(16.6%) + 창업도약(3~7년)(27.6%) = 44.2%



- 창업 7년 이상 단계에서 규제로 인해 큰 애로를 겪고 있다는 응답도 상당하여, 창업기업뿐만 아니라, 창업 7년 이후 성장·성숙기 기업 대상 규제 혁신을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필요

3 신산업 규제 애로

1 규제로 인한 투자계획 지연·축소/포기 여부 : 中企 58.2%

- 응답 中企의 절반 이상(58.2%)은 규제로 인해 투자계획을 지연·축소하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매출액이 높을수록 규제로 인한 투자계획 지연·축소·포기 경험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투자계획지연·축소·포기경험비율(%) : (5억 미만)52.4, (10억 미만)53.6, (50억 미만)54.2, (100억 미만)56.5, (300억 미만)68.7, (300억 이상)60

- 업종별로 투자계획 지연·축소·포기 경험 응답비율은 식품(65.0%), 섬유(64.7%), 금속(61.2%), 유통(59.7%), 기계(58.1%), 화공(51.5%), 전기·전자(48.5%), 정보처리(47.4%) 순으로 나타남

- 식품, 섬유, 금속 업종이 규제로 인한 투자계획 지연·축소·포기 등의 애로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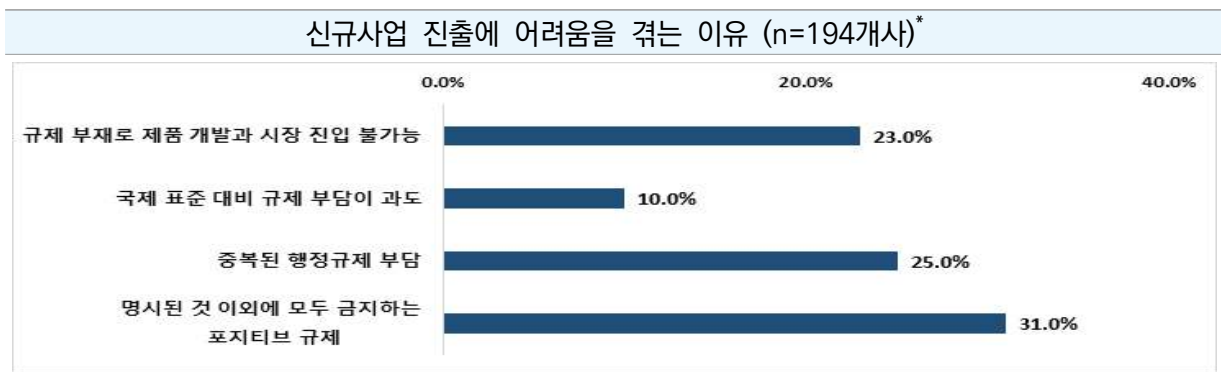
- 비수도권 기업(59.5%)이 수도권 기업(56.3%) 대비 규제로 인해 투자계획을 지연·축소하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음

② 규제로 인한 신규사업 진출 어려움 경험 여부 : 中企 55.1%

- 응답 中企의 절반 이상(55.1%)은 규제로 인해 신규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업종별 규제로 인해 신규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식품(75.0%), 섬유(64.7%), 화공(57.6%), 유통(54.8%), 전기·전자(54.5%), 기계(52.7%), 금속(50.7%), 정보처리(42.1%) 순으로 나타나, 식품·섬유·화공 업종이 전체 평균(55.1%) 대비 규제로 인한 신규 진출 애로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여짐
- 업력별로 업력 7년 이상 기업의 신규사업 진출 어려움 경험 여부 응답 비율(57.0%)이 업력 7년 미만(48.8%) 기업 대비 높아, 창업 단계 기업뿐만 아니라, 성장·성숙단계 기업의 규제개선 강화 필요
- 비수도권 기업(57.6%)이 수도권 기업(51.4%) 대비 규제로 인해 신규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 비중이 높음
 - 신규사업 진출 시 체감하는 규제수준은 지방기업이 수도권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됨

③ 신규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 포지티브 규제(31.0%)

- 신규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명시된 것 이외에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31.0%)”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중복된 행정규제 부담(25.0%), 규제 부재로 인해 제품 개발과 시장 진입 불가능(23.0%), 국제 표준 대비 규제 부담이 과도(10.0%) 순으로 응답함



* 규제로 인해 신규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94개사

- 기타 의견으로는 환경규제(산업안전보건법),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제, 규제에 의한 지연으로 사업계획 차질 등이 있었음

- 업종별로 금속 업종은 중복된 행정규제(40.0%)를, 화공/전기·전자/식품 업종은 규제 부재로 인한 제품 개발과 시장진입 불가능(36.8%/36.8%/37.5%)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선택하여, 업종별 애로분야가 상이한 것으로 조사됨

4] 규제개선이 가장 시급한 미래 신산업 분야 :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신소재(29.9%)

- 규제개선이 가장 시급한 미래 신산업 분야로는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신소재응답 비중(29.9%)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ICT 융합(IoT·빅데이터, AI, VR·AR, 클라우드, 지능로봇)(14.8%),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이동수단(14.2%), 바이오·의료(의약품·바이오, 의료기기·서비스)(12.6%), 무인이동체(드론, 자율주행차, 무인 선박 등)(8.7%), 신서비스(핀테크, O2O)(5.6%) 순으로 나타남

5] 기타 의견

구분	주요내용
규제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필요한 행정절차 완화 ◆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변경 필요 ◆ 신규 규제 제정시 산업계의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 제공 ◆ 기업의 규모와 현실에 맞는 유연한 규제 적용 필요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관련 대출 규제 완화, 세제 완화 ◆ 업력 7년 이상 기업 지원 강화 ◆ 자금 대출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 기업 상장 심사단계에서 소액주주 전원의 보호예수동의서 제출 필요. 이민자, 실종자, 사망자도 제출 필수, 예외조항 마련 필요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 적용기준 및 주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규제 완화 필요 ◆ 조선업종 인력 부족 심각. 신규 인력 채용시 기숙사 지원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기업 부담 심화 ◆ 내국인 현장인력 수급 애로 발생,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완화, 외국인 기능인력 기한 연장, 기업 자율 연수인력 확보 필요
조달·판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실적 인정 범위 확대 ◆ 신규 개발 제품 KC 인증, 성능인증 비용 지원 또는 인증 비용 절감 ◆ 조달청 입찰 참가시 신용평가서 징구 시점 개선 (기존) 입찰참가시 → (개선) 적격 검사기간 내 제출 ◆ 조달청 입찰 인력 평가시 자격증 보유자 뿐만 아니라, 박사, 석사 학위소지자도 동일한 자격 부여 검토 요청 ◆ 나라장터 입찰시 품질관련 인증(KS, 조달품질보증단체표준 등) 통합 또는 간소화 검토. 일부 조달품질보증은 특정협회를 통해서만 컨설팅 가능하여, 부담이 큼 ◆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조달 등록단가가 연동될 수 있는 제도 마련
신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산업 분야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 로봇 배터리 인증 규격 마련 필요

03 | 정책적 시사점

1 선제적 규제 개선을 통해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

○ 규제 건의 피드백 강화와 절차 간소화 등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 개편을 통한 규제 혁신 체감도 제고

- 응답 中企 10곳 중 4곳(44.6%) 이상은 규제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은 경험이 있었으나, 애로사항을 겪은 中企의 절반 이상은 정부 규제 중개기관·민간단체를 통해 건의하기보다는 기업 자체 대응하고 있음
- 또한, 정책 중개기관을 통해 규제 건의시 불충분한 피드백과 번거로운 건의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어, 규제건의 이후 처리상황과 개선결과 공유가 가능하도록 규제관리 시스템 고도화 필요
- 아울러, 中企 현장에서 발굴·접수된 규제들을 DB화하여 개선 필요성이 높은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규제 개선 체감도 제고

○ 신산업 분야 및 업력 7년 이상 성장기·성숙기 규제 발굴·개선 강화 필요

- 신산업 분야가 기존산업 대비, 업력 7년 이상 기업이 7년 미만 기업 대비 규제 애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산업 분야와 업력 7년 이상 성장기·성숙기 기업의 규제 발굴·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필요
- 규제로 인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력 채용 포기(28.6%), 매출감소(25.7%), 사업확장 포기(연기)(23.4%) 순으로 나타나, 일자리,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경제활력 제고 필요

2 中企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적극적·체계적 발굴 개선 ▶▶

○ 응답 中企 10곳 중 4곳은 올해 기업 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하여,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 혁신 필요

- 응답 中企의 10곳 중 4곳(38.0%)은 올해 기업 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했으며, 업종별, 수출여부, 업력별로 규제 환경 전망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규제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한 사유로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 부족 (51.8%)”을 가장 많이 꼽아,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체감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中企가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혁신 필요

○ 응답 中企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고용·노동 분야 규제 개선을 강화하고, 신제품 개발, 조달·입찰 참여 등 기업현장에서 실제로 원하는 현장애로의 적극적·체계적 발굴과 개선 필요

- 응답 中企는 고용·노동(38.2%)과 자금조달(금융)(15.6%) 분야 규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세부적으로 주52시간제/최저임금제/자금조달 (23.9/20.1/20.1%) 등이 가장 부담이 큰 규제이슈로 조사됨

- 업종별로 기업 규제환경 전망과 부담을 느끼는 규제에도 차이*가 있어, 업종별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적극적·체계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는 노력 필요

* 전기·전자, 화공, 정보처리 업종은 규제환경을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전망했으며, 금속, 식품 업종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전망

* 전반적으로 고용·노동 분야 규제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정보처리는 신사업 사업화 규제, 금속, 화공 업종은 환경규제, 식품·유통 업종은 자금조달(금융)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큰 애로를 겪고 있음

- 또한, 가장 개선이 필요한 규제 조사된 금융지원 조건 완화(42.4%), 신제품·신기술 개발 지원 강화(17.5%), 서류제출·절차 간소화(9.8%), 조달·입찰 등 참여 기준, 절차 등 완화(9.1%), 건축·설비 규제 합리화(8.2%) 등은 우선적으로 개선 추진 필요

- 중소기업은 불합리한 행정규제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지원 요건이나 기준을 규제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피규제자 중심의 中企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각종 지원사업의 요건과 기준 합리화, 절차 간소화 등 기업현장에서 실제로 원하는 현장애로 개선 강화 필요

○ **중소기업 비용·행정부담 완화와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 등의 정책적 노력 확대 필요**

- 규제혁신을 위한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는 중소기업 비용·행정부담 완화(31.4%),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27.7%)를 가장 많이 응답하여, 이러한 정책적 수요를 바탕으로, 현장규제 혁신과 과도한 규제 신설을 방지하여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 필요

3 신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 **응답 中企 절반 이상은 포지티브 규제, 중복 행정규제 등으로 신규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애로수준이 높았던 업력 7년 이상 성장기·성숙기 기업, 지방기업의 규제혁신 정책 노력 강화 필요**

- 응답 中企 10곳 중 절반 이상(55.2%) 이상은 규제로 인해 신규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포지티브 규제*, 중복된 행정규제, 규제 부재로 제품개발과 시장진입 불가능 등이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조사됨

* 명시된 것 이외에 모두 금지

- 업력 7년 이상 기업(57.0%)이 업력 7년 미만 기업(48.8%) 대비, 비수도권 기업(57.6%)이 수도권 기업(51.4%) 대비 규제로 인해 신규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많아, 업력 7년 이상 성장기·성숙기, 지방기업의 규제 발굴·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필요

참고 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22.6.23.).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
- 관계부처 합동. (2022.7.28.).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
- 관계부처 합동. (2022.9.5.).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 관계부처 합동. (2022.10.17.).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 관계부처 합동. (2022.10.17.). 현장애로 해소 중심의 경제 규제 혁신 방안 .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2.6.14). 「규제혁신에 국가역량 총결집, 경제 재도약 선도」.

작성진

작성책임자 **정병욱** 규제정책연구실장

작성자 **양지애** 규제정책연구실 부장



발행인 김학도

편집인 규제정책연구실

발행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52851)

전화 : 055-751-9273, 팩스 : 055-751-9411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